

임종헌 구속기소... 양승태 수사는 아직 '먼 길'

〈前 법원행정처 차장〉

〈前 대법원장〉

직권남용 등 범죄사실 30개 넘어
일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핵심혐의
양승태 '증거' 수사 방향 가를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기소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의 '지름길'이 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수사 관련 첫 재판이 열리게 됐다.

임 전 차장의 공소사실은 구속영장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달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죄명을 적었다. 개별 범죄사실은 30개가 넘는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차장을 지낸 임 전 차장은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 의혹 대부분에 실무 책임자로 등장한다.

임 전 차장의 핵심 혐의는 일제 강제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이다. 임 전 차장은 2013년 9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특정 방향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법원

행정처 심의관에게 작성케 하고, 청와대·외교부 관계자들과 소송 절차와 결론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한 2016년 11월 '비선실세' 최순실 씨 구속 이후 청와대 측의 부탁으로 행정처가 수백쪽에 달하는 'VIP 관련 직권남용죄 벌리 모음' 문건을 만들어 법리 검토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을 재판에 넘기고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할 예정이다. 세 사람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공범으로 적시됐다.

우선 검찰은 박병대 전 대법관을 19일 오전 9시 30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2014년~2017년 법원행정처장을 연이어 지낸 박·고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직계 상급자격으로, 임 전 차장을 통해 사법농단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세 사람의 소환조사가 구속수

사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임 전 차장은 구속기간 내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소환 통보에 불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농단 수사가 증거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관련자 진술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임 전 차장의 영장 청구서에 양 전 대법원장이 공범으로 적시됐다 해도, 그가 영장 청구 대상은 아니었으므로 범죄혐의 소명은 별개라는 것이 학계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달 27일 법원이 인정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에 버금가는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수사 방향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요건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증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다.

/이법종 기자 joker@metroseoul.co.kr

대체복무 36개월 유력... 교정시설 취사업무

국방부, 육군병사 복무기간 2배
대체복무자 연 600명 상한설정



지난 5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열린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에서 사회단체회원들이 대체복무 제안 수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이 3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복무기관으로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으로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6개월 안에 대해 "산업기능요원과 공중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복무기간 34~3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복무)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36개월 복무는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기간의 2배다. 대체복무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국방부는 27개월 안에 대해서는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징벌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며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27개월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

국방부는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복무기관을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는 1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복무기관이 교정시설로 확정되면 대체복무자들은 취사나 물품 보급 등 수감자들이 교도소 직원과 함께 수행하던 업무를 대신하게 될 전망이다.

이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들이 교정시설에서 취사나 물품 보급 업무를 하게 되면 앞으로 수감자들은 이런 업무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자 연간 600명이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이 당국자는 "대체복무자는 연간 500명 내외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연 600명을 상한으로 설정하되, 시행 첫째(2020년)에는 대기자원을 고려해 1천200명을 배정하고, 그 이후에 600명으로 배정 인원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대체복무 대상자를 판정하는 심사위원회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는 방안(1안)과 복무분야 소관부처 소속으로 두는 방안(2안)이 검토대상이다.

/문형철 기자 captinm@



이낙연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열린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과학기술 관련 전략과 사업,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11년 만에 부활했다. /연합뉴스

경제자유구역 108개기업 '일자리 박람회'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일자리 박람회가 14일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컨벤시아 전시장에서 개최됐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이번 박람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맞춰 4개 업종별 기업관에 108개사가 참가해 기업별 채용상담회를 진행했다.

또한, 전국 7개 경제자유구청과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투자유치 홍보관을 설치·운영했다.

한편, 이날 박람회에 앞서 열린 제2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에서는 경제자유구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현안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발표된 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 정책방향과 투자지원개편 동향 등을 공유하고, 경제자유구공자 37명에 대한 산업부 장관 표창의 자리도 마련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김용채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을 규제혁신의 실험장으로 전환하고, 국내외 대학·연구기관을 집중화해 혁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매년 순회 개최하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협의회를 경제자유구역별 특색 있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사업 발굴의 자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완성차 기업 상생협력 활동 강화해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업계 초청으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자동차업계는 내수활성화와 경쟁력 회복을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했고 정부는 업계 건의를 반영해 자동차산업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완성차 기업 대표, 1·2차 협력기업 대표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자동차산업협회, 관련 전문가 등 위원이 함께 참석했다. 완성차 업계는 신차개발 가속화, 부품

기업과 상생협력 강화,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등 향후 발전방안을 밝히면서 국내 생산 400만대 이상 유지, 2025년경 450만대 수준으로 회복의 향후 비전을 제시했다. 다만,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내수활성화, 부품업체 금융 지원, 규제 완화 등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성 장관은 "오늘 간담회는 부품업체, 완성차업체와 정부가 함께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극복방안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라며 "벨류체인이 무너지기 전에 2·3차 협력사 지원 등 완성차 기업의 상생협력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신용 기자

법무부-키르기즈 공화국 형사사법공조 강화 협력

법무부와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이 14일 형사사법공조 강화를 약속했다.

이날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잠시토브 오토쿠르베크 키르기즈 공화국 검찰총장과 '범죄인인도조약' '형사사법공조조약' '수형자이송조약'에 대한 서명식을 진행했다.

범죄인 인도는 외국에 있는 범죄인의 수사·재판·형집행 등 형사절차 진행을 목적으로 요청국이 청구하면 자국으로 인도받는 절차다. 법무부는 지난 5년간 양국이 3건의 형사사법공조와 2건의 범죄인인도 청구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법종 기자

노동부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 개최

고용노동부는 14일 서울 강남 SETEC에서 '제3회 일·생활 균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고, 일·생활 균형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경제단체와 우수기업 임직원, 일반 국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명사 특강, 공모전 시상, 전시회 등 다

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일하는 방식 혁신 등 기업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며 "정부도 일하는 모든 분들의 일·생활 균형과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늘리고 인식개선 캠페인, 우수사례 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